

기후위기와 노동자건강권 연구소 회원/후원회원 간담회

기후위기와 노동자 건강권 연구소 회원/후원회원 간담회

2022.08.25 오후 7시 (서울사무실, ZOOM)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투쟁의 과제를
연구소 현장 회원/후원회원들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안내사항

- 대상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후원회원
 - 순서 : 현장회원/후원회원 발제 각 15분,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 1) 자동차 산업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유준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 2) 야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3)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
-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문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ilshlabor@gmail.com

I. 자동차 산업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교통 공공성 강화

유준 (금속노조 전북지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부장이 아니라 금속노조 소속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노동자건강권 등 의제의 문제보다 각기 다른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를 목표로 삼았다면, 지부와 지회 단위에서는 중앙의 목표에 부합하며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를 위한 토론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도 벅찬 현장의 상황이 노동자가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큰 담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 지부 사업으로 부품사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 내 하청사업장을 들여봐도 회사가 유지되는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전북지역 부품사에 관한 연구자료가 나오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자체가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밀려나고 최저임금 사업장은 임금 투쟁에서 멀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사업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 존재하는 금속노조는 대부분 소수 노조이고 노조 전임자조차 없는 곳이 많고 노조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연대 투쟁이나 회의로 연월차를 전부 소진하는 간부가 상당수입니다.

이렇게 공장 안에 갇힌 노동자를 사회문제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여 투쟁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노동조합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상용차대책위 활동과 고민

금속노조의 경우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에서 연구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노동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을 하였습니다.

중대형 상용차의 95% 이상을 생산하는 전북에서는 2020년 발생한 생산절벽으로 인한 위기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완성차공장인 타타대우상용차와 현대차 전주공장 위원회가 함께 상용차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 전북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큰 문제는 상용차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용차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흐름과 자동차산업 정책에서 상용차정책의 부재, 물류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해 국회토론을 비롯해 금속노조차원의 토론, 지역에서의 토론회 등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점은 고용이었습니다.

상용차대책위를 구성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며 조합원 교육도 진행했고, 정책담당자의 주기적인 회의를 하였음에도 온실가스 절감보다 산업전환으로 고용의 문제가 발생 되는 것과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만 공감을 얻었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품사공장 노동자들

전기차 투입 전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완성차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에는 고용은 급진적인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노동조합은 자기 공장에 전기차량 유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전환은 이미 시작 되었는데 내연기관 부품사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부품사 일수록 아무 준비 없이 내연기관의 퇴장과 함께 폐업만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측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내연기관 부품사의 산업전환은 노정교섭과 원청과의 사회적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와 하청 사측은 의지가 없으니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측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대중교통 사유화 시도

현대차는 모든 이동수단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을 하늘을 나는 UAM과 무인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PBV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현대차의 계획은 뜬구름 같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미래 대중교통의 대안을 사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자본주의가 생각하는 미래 정부의 형태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나가며

다시 기후위기로 돌아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는 단협에 산업전환 조항을 넣기 위해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기후위기 교육을 했습니다. 조합원 의무교육 교안을 만들고 동영상 교보재도 만들어 배포 했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지만 고용을 뛰어넘는 의제로 투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3번의 독서 토론회를 통해 탈성장에 대해 가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자본주의 방식의 무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의 변화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진행 중인 것을 보며 더 이상의 성장은 지구의 파괴로 이어져 인류의 멸종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타파할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탈성장에 대한 토론을 이어 나간다면 노동계를 관통할 수 있는 의제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Ⅱ. 야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1. 서비스연맹 소개

- 11만 서비스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연맹
- 주요 업종 : 돌봄노동(요양보호사), 학교 예술강사, 가전 설치 수리 점검원, 택배기사, 관광레저업 노동자, 학교 노동자 (급식조리원, 청소원 등), 퀵서비스기사, 마트 노동자, 플랫폼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백화점 면세점 판매노동자 등등
- 불안정노동자 , 여성노동자 다수

2. 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

“저임금, 장시간 노동”_ 22년 3월~4월 약 4200명 대상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서비스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7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에 따르면 2021년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73만원, 이 가운데 정규직이 344만원, 비정규직이 180만원이다(김유선, 2021.12).
- 그리고 순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및 업무 관련 지출을 제외한 공제후 임금, 특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차량유지비, 휴대폰, 영업비용 등 업무 관련 고정비 지출을 제외한 순소득임은 월 230만원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28만원으로 남성의 월평균 임금 349만원의 65%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에서 조사된 남성 대비 여성 월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 72.0%에 비해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상동)
- 연령별 임금 곡선은 20대에서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르다가 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곡선을 보인다. 연령별 생애임금 곡선이 정규직보다는 정점이 낮고, 비정규직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 근속에 따른 임금은 근속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오르다가 일반 정규직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다르게 2-5년 미만을 정점으로 다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근속기간 20년 이상은 다시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비스노동자 가운데 근속 20년 이상이 매우 적은 가운데, 근속 20년 이상 근속자가 있는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전보안 통신서비스와 관광레저 업종에서 근속 20년 이상 노동자 비중이 크다.

- 고용 형태별로 보면 특고 플랫폼 노동이 342 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정규직 277 만원, 기간제 259 만원, 무기계약직 227 만원 순이다. 특고, 플랫폼 노동의 임금 수준을 해석할 때는 차량 유지비 등 업무 관련 고정비 지출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증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 자료와 비교하면 정규직의 경우 경찰부가조사 정규직 임금 344만원보다 낮고, 비정규직의 경우 경찰부가조사 18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전반적으로 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조사 결과는 낮은 임금과 더불어 근속에 따른 임금 비례가 정책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트 배송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2021.08) 중>

마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에게 배송 가능한 시간대가 12시간 이상으로 홈플러스는 10시~22시, 이마트는 06~22시인데 22시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송 준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은 소속된 마트의 배송업무를 해야 한다. 대부분 주6일 근무로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다.

명세서상 지급받는 운송료 총액은 월 3~400만 원 정도 되긴 하지만 차량 할부금, 지입료, 보험료 등 각종 공제되는 금액과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 등 차량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입은 200만 원 증반대이다. 수입이 적어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업은 학교급식이나 식자재 배송, 마켓컬리나 쿠팡 등을 많이 한다.

3. 저임금-장시간/야간노동-과다탄소배출의 고리

- 과거 제조업에서 성행하던 야간노동은 서비스업으로 한국의 산업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이제는 유통·물류 서비스 등의 업종으로 성행 중.
 - cf. 24시간 주야 맞교대로 돌아가던 제조업 공장은 “밤에는 잠 좀 자자!”라며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아주 야심한 새벽의 몇 시간은 공장을 멈춤 → 이제 밤샘노동을 하는 이들은 서비스 노동자
- (과거)편의점과 식당·술집, 영화관의 서비스 노동자 밤을 새워 일함. 대형마트가 한참 막 들어서던 시절, 마트는 24시간-연중무휴 영업 했음 (마트 폐점시간이 생기고 달에 이틀 의무휴업일이 생긴지 고작 10년)
- 한편,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와 더불어 모바일·스마트폰 보급·이용이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온라인 유통도 덩달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온라인쇼핑몰에

서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물류(택배 등) 서비스업도 함께 부상. 그 추세는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급증했고, 마트의 온라인 배송기사나 택배기사 등 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과로와 그로 인한 건강권·생명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 →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 인공태양이 꺼지지 않는 새로운 공장 "서비스업" →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과대 배출되는 탄소들(물류센터, 배송차량, 소비사회의 가속화)

4. 돌봄사회로의 전환, 에코잡으로서의 돌봄일자리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사이트 : 안 보이던 히말라야가 보였다. (히말라야 산과 160km 떨어진 인도 북부 편자브 지역에서 30년 만에 히말라야 정경이 펼쳐짐. 팬데믹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고 주변 공장들이 멈추며 스모그가 사라진 결과) → 세계가 마비되었으나 돌봄은 계속 움직였던 시기.

- 인간의 필수조건인 돌봄의 위상! : 나와 주변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봄사회의 핵심 메세지. → 그러나 심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

- 현재 서비스업이 불 꺼지지 않는 새로운 공장이 된 이유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간 결과.

Q1. 서비스노동자가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일터를 만든다면?

= 저임금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안해도 된다면?

- 불안정노동 차별(특고노동자) 문제 해결

- 플랫폼 안전배달제 같은 임금체계/노동강도의 전환을 주는 제도적 상상력: 천천히 일하고 많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 물류유통업의 심야노동 규제: 12~04시 온라인주문배송 막기

Q2. 에코잡=돌봄일자리의 확산, 가치 재고

- 무엇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수적인가? → 인간의 필수조건인 돌봄에 대한 사회전반의 가치전환을 불러일으키려면 '돌봄일자리' 가치 재고에서 시작 하길 바람.

- 사례: 팬데믹 시기 캐나다가 코로나19 와중에도 근무를 계속하며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 요양보조사, 사회복지사 같은 이들을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그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함

- 심지어 탄소발생을 과다하게 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Ⅲ.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대책 요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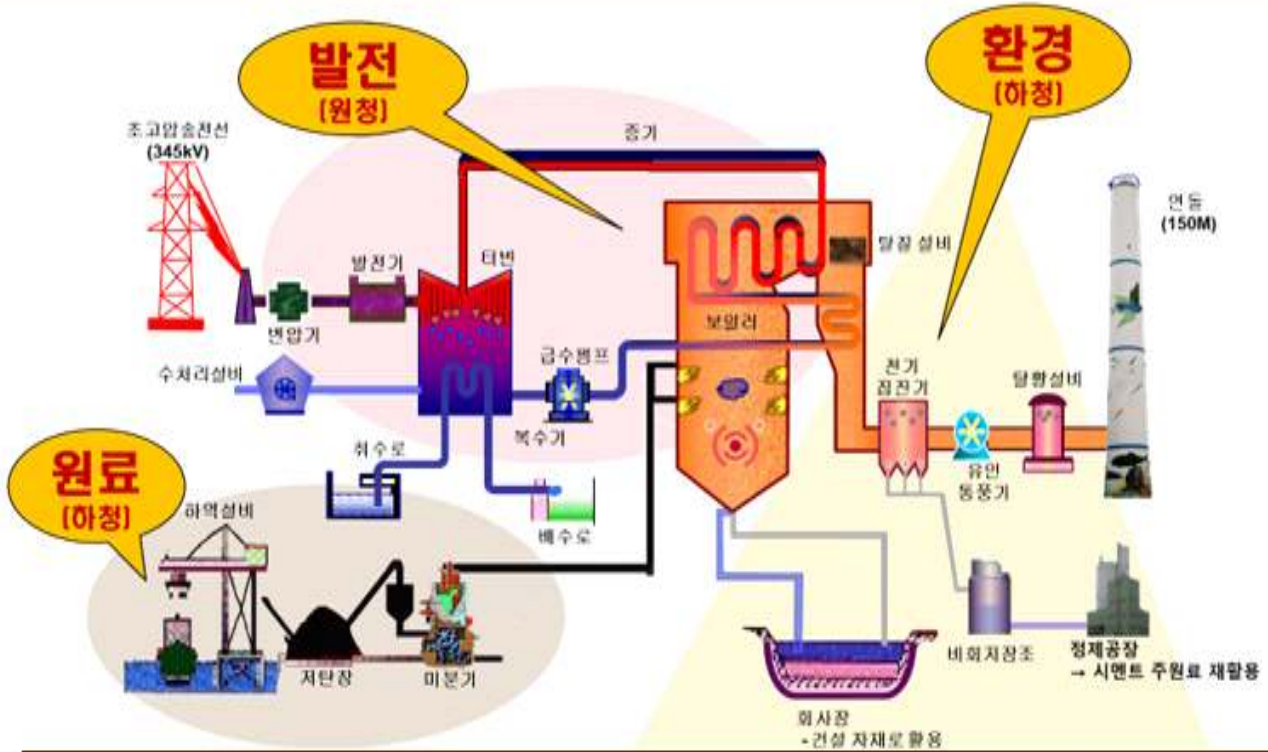
2022. 08. 25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석탄화력발전소 계통도



발전사 정규직: 13,846명 원료/환경 운전-정비-사회사(청소,경비) 8,204명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이직, 전직 실태 현황

기 폐지 석탄화력 8기 인력 1,407명 중, 1,346명(95%) 재배치 완료, 39명 해고

연도	사업소	발전사		협력사	
		기존	■지 우	기존	■지 우
2017	서천 1,2	139명	전원 재배치	218명	197명 재배치 8명 정년 13명 감축
2017	영동 1,2	213명	전원 재배치	158명	148명 재배치 10명 감축
2020	보령 1,2	139명	전원 재배치	146명	124명 재배치 6명 정년 16명 감축
2020	삼천포 1,2	110명	전원 재배치	145명	137명 재배치 8명 정년
합계		601명	전원 재배치	667명	606명 재배치 22명 정년 39명 감축



동서발전의 노동자 재배치 현황 및 계획

사업소 (폐지일)	회사명	주요업무	현원	잔류	재배치	정년 퇴직	계약 해지
호남 (21.12.31)	한전산업개발	환경설비 운전위탁 경상정비	68	-	64	2	2*
	한전KPS	경상정비	53	6	46	1	-
	케이티엠	경상정비	12	-	-	-	12**
	합계		133	6	110	3	14
울산지역 (22.1.31)	한전산업개발	환경설비 운전위탁	36	-	36	-	-
	한전KPS	경상정비	32	7	25	-	-
	아전아엔씨	경상정비	20	-	-	-	20**
	합계		88	7	61	-	20
			221	13	171	3	34

* 계약직 채용으로 계약기간만료되어 계약해지

** 단기계약(계약기간: 21.1.1~22.3.1)으로
계약종료일 도래하여 계약종료

해고
14명

- 케이티엠: 14명 중 9명 여수지역

기업재취업가능업체연결

(최종 입사여부는 확인 곤란)

해고
20명

- 아전아엔씨: 울산지역재취업 희망자대상 인근

기업 취업지원 예정

(발전소 내 경성정비업체 구축현황 파악등)

281명 타지역으로 재배치



발전소 폐쇄 무대책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을 죽였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건 개요

1. 개요

가. 일시: 21년 10월 15일(금) 08:55경

나. 장소: 삼천포발전본부 회정제공장 전기팀 비품창고

다. 사망자: 이00(38) / 경상정비 전기팀

라. 소속사: 고 김용균 노동자 같은 소속의 한국발전기술

마. 원청사: 한국남동발전

바. 입사일: 15년 3월으로 아내와 어린 딸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 오

사. 사고사 상황

- 1) 10.14(목) 17:32분경 퇴근(지문인식기)
- 2) 17:52분경, 정문통과(출)
- 3) 17:58분경, 정문통과(입)
- 4) 10.15(금) 08:33분경, 회정제공장 앞 주차장에서 고인 차량 발견
- 5) 08:55분경, 회정제공장 전기팀 비품창고에서 고인 발견
- 6) 08:57분경, 경찰신고
- 7) 09:10분경, 경찰 및 가족 현장도착 및 유서발견
- 8) 09:18분경, 119구급대 도착
- 9) 09:21분경, 사망확인후 경찰연계



- 폐쇄 현실 속에서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고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과 함께 공기업 이직 준비였음.

- 일과 재취업을 병행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 발전소 폐쇄 정부정책의 전환 비정규직 개인 감당 힘든 현실

- 결국 고인은 이직을 중단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

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차원의 연구용역 필요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2.)에 따라 충남도는 ’34년까지 총14기 석탄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충남차원의 연구용역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예정)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수요조사와 피해정도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통계로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고용환경 변화에 대비)

<표 6-73>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십억원)

지역	경제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2	
	GRDP 규모 (2017)	생산유발 감소금액	GRDP 규모 (2017)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충청남도	110,165	19,208	110,165	7,830
경상남도	106,561	17,564	106,561	7,518
인천광역시	85,791	2,832	85,791	1,140
전라남도	71,340	2,331	71,340	1,076

출처: KOSIS

<표 6-74>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명)

지역	경활인구 (2019)	고용 영향	
		취업유발 감소인원	비중
충청남도	1,231,000	7,577	0.62%
경상남도	1,817,000	7,896	0.43%
인천광역시	1,653,000	1,543	0.09%
전라남도	999,000	631	0.06%

<표 6-75> 감소인원 카테고리별 분석

구분	감소인원(명)	비중	추정방법
발전소 직접근로자	2,132	21.1%	현황 자료
상권 근로자 (연관 소상공인)	3,100	17.6%	유발계수에 의한 추정
발전소 협력업체 및 연관업체 근로자	12,415	70.3%	발전소와 상권 감소인원 이외의 인원
합계	17,647	100%	

■ 연차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LNG 전환 계획

2024	삼천포#3-4(1,120)	24. 12	폐쇄와 건설 시기 불일치 고용불안, 지역붕괴 불가피	LNG연료전환 26.10 준공예정 (삼천포)
2025	보령#5-6 (1,000)	25. 12		LNG연료전환 (보령, 함안)
	태안#1-2 (1,000)	25. 12		LNG연료전환 (공주, 여수)
2026	하동#1(500)	26. 06		LNG연료전환 (하동)
2027	하동#2 (500)	27. 07		LNG연료전환 (하동)
	삼천포#5(500)	27. 07		LNG연료전환 (삼천포)
2028	삼천포#6	28.01	LNG연료전환 미정	
	태안#3	28.12	LNG연료전환 (여수)	
	하동#3-4(2,000)	28.06/12	LNG연료전환 (안동, 함천)	
	서인천복합#1~6 (1,800)	28년 LNG 도매	-	
2029	태안#4(500)	29. 12	LNG연료전환 미정	
	당진#1-2(1,000)	29. 12	LNG연료전환 (호남)	
2030	당진#3-4(1,000)	30.09	LNG연료전환 (울산)	
2031	하동#5-6(1,000)	31.06/12	LNG연료전환 (하동)	
2032	태안#5-6(1,000)	32. 12	LNG연료전환 미정	
2034	영흥#1-2(1,600)	34. 09/12	LNG연료전환 미정	
합계	15,340 (30기)		충남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 이주건설 예정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 12. 2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비고:

2022년 1월 현재 폐지된 석탄발전소: 영동 #1,2. 사천 #1,2. 보령 #1,2. 삼천포 #1,2. 호남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에너지 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 공약

국민의힘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탄소중립 공감 • 산업계 의견, 사회적 합의 필요
원자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 신한울 건설 재개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발전 통한 탄소 중립 •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실적 목표로



그래픽 박혜수 기자 hpark@newsway.co.kr

Newsway

③ (석탄+LNG)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에너지도 활용

① (석탄발전) 전력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전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

임기중 화력(석탄+LNG) 발전 비중 40% 대로 감축 / 노동대책은 전무함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에너지 정책 방향

☑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추진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체계 강화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등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

•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 **전력시장 다원화, 경쟁기반 전력시장 강화**
 기저전원·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추진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② (전력 新산업)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전망·성공 가능성·경제적효과가 우수한 **핵심 전력 新산업** 지속 발굴

· [예] VPP, 차세대 ESS(장주기 ESS, 사용후 배터리),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섹터커플링 등

• 시장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술개발, 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④ '20년 대비 '30년 목표 : (기업수) 2,500개 → 5,000개, (일자리) 3만개 → 1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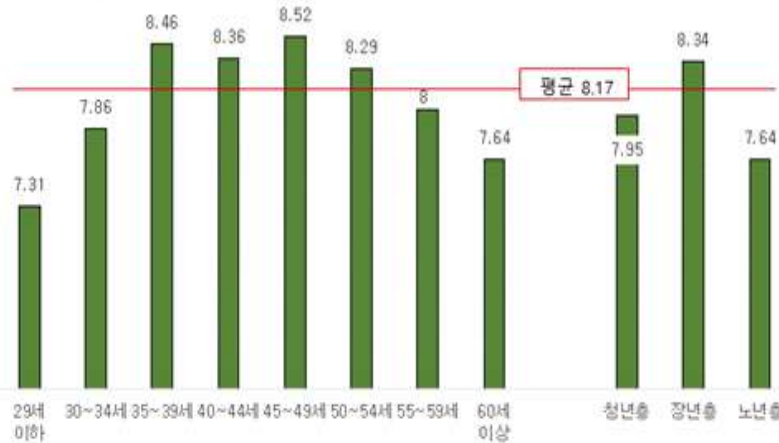
■ 공공운수노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연구용역결과(22년7월11일 토론회)

II. 조사결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인식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 비정규노동자의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인식

- 고용이 “불안하다”는 응답자 중에서 “매우 불안하다” 56.9%
- 고용이 “불안하다”는 응답자 중에서 “매우 불안하다” 56.9%
- 불안하다는 인식 정도 역시 8.17점 / 10점으로 매우 높음

[표] 나이대별



II. 조사결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인식

■ 2021년과 비교 :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발전 비정규노동자의 비중 37.5% → 56.9%(19.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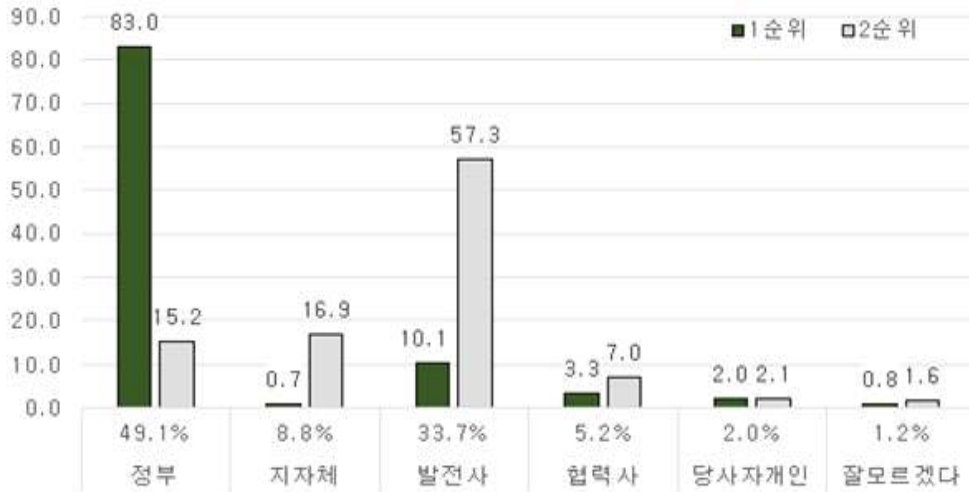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고용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중 76% → 79.2%



II. 조사결과 :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고용주체

■ 비정규노동자의 **83%**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가 고용보장의 책임 주체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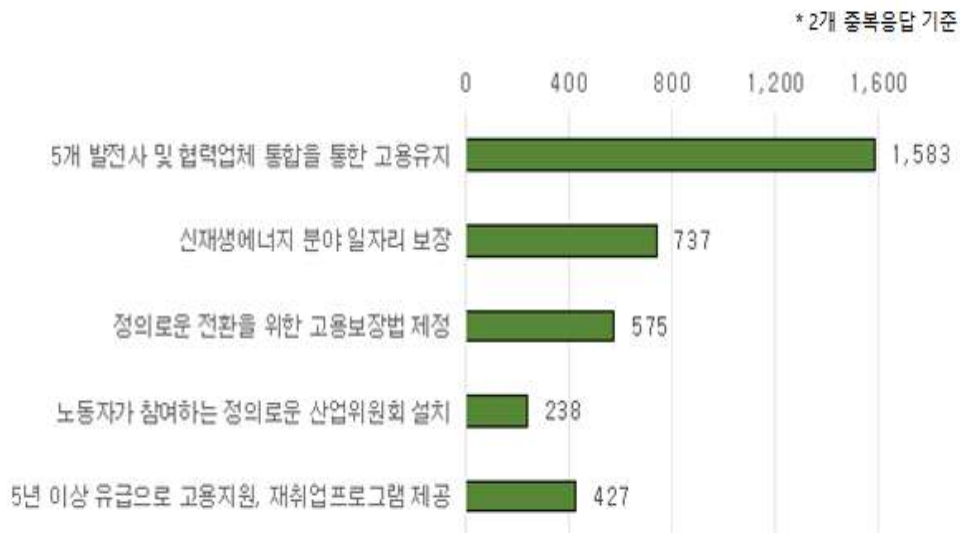
● (우선순위분석) 1순위 : 국가(83%), 2순위 : 발전사(57.3%)



✓ 발전소 폐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며, 국가 차원에서 총고용 보장 원칙 중요하다고 인식

II. 조사결과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

■ 비정규노동자의 **78%**가 “5개 발전사 및 협력업체 통합을 통한 고용유지” 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



✓ 고용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지원은 당사자 수용성이나 대안정책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

□ 주요 조사내용

- 충남지역의 산업·고용·경제 현황
- 폐쇄에 따른 LNG발전소 대체건설현황, 신재생에너지 충남 추진현황
- 발전소 폐지로 인한 산업·고용 환경 변화의 정량적 자료
- 지역의 산업·고용·경제 변화 전망
-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해소 방안 등
-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 연구용역 노동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소통과 현장의견 반영

□ 참고자료 독일사례



독일의 탈 석탄 실업 노동자 지원정책

■ 고용조정지원금 지급⁵⁾

- 연방정부는 脫석탄정책 추진으로 실업상태에 직면할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사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조정지원금(Anpassungsgeld)’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고용전환지원금은 2038년까지 예정된 脫석탄 일정에 따라 고용을 상실하게 될 석탄광 및 석탄갈탄화력 발전소 근로자(연방정부 추산: 최대 40,000명)에게 공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지급 요건 및 규모) 脫석탄 추진으로 실업상황을 맞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 58세까지 최장 5년까지 고용조정지원금(48.1억 유로)을 지원하여 실업상황으로 인한 소득감축을 보전하며,⁶⁾ 조기 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6조 4800억원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구분	2020결산	2021 계획액		2022년도		증감	
		당초액	수정	요구	조정액	B-A	단위:백만 %
총계	924219	1,411,814	1,411,814	3,178,080	2,688,574	1,289,083	91.3
6332 유역개설사업	99,636	107,890	107,890	141,498	127,932	20,662	18.6
노동전환지원금(6332-300)	-	-	-	8,000	5,700	5,700	순증
노동전환지원금(6332-301)	-	-	-	7,400	5,260	5,260	순증
사업전환고용 안정지원금(6332-302)	-	-	-	5,000	5,000	5,000	순증
신재생에너지역량강화사업 (6332-400)	16,000	10,000	10,000	11,000	11,000	1,000	10.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6332-401)	76,885	86,898	86,898	86,898	86,898		
조선기(100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전환지원금(6332-402)	5,300	6,990	6,990	5,200	5,200	△1,790	△25.6
사업전환지원금(6332-403)	1,671	4,002	4,002	18,000	8,894	4,882	122.0

150억
전부

2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보장

가. 고용보장과 에너지 전환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지역전환 개발

다. 고용과 연계한 선고용-후교육 취업프로그램 발굴 및 기업지원

가

고용보장과 에너지 전환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 석탄화력발전소 2034년 28호기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반드시 필요
(34년까지 28호기 폐쇄 예정. **생산감소:41조9천억, 취업감소:17,564명**)

◆ 석탄화력발전 30기 폐쇄 - LNG발전 24기 전환시 전환불가 추정인원(산자부 연구결과)

구분	석탄화력(30기)	LNG발전(24기)	전환불가인원
발전본부	2,625	1,404	1,221
협력업체	5,310	1,620	3,690
합계	7,935	3,024	4,911

<표 6-72>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명)

지역	생산유발감소금액	부가가치 유발감소금액	취업유발감소인원
충청남도 (14기)	19,208	7,830	7,577
경상남도 (12기)	17,564	7,518	7,896
인천 (2기)	2,832	1,140	1,543
전라남도 (2기)	2,331	1,076	631
합계	41,936	17,564	17,647

<표 3-29>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십억원)

지역	발전소명	경제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2	
		GRDP 규모 (2017)	생산유발 감소금액	GRDP 규모 (2017)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하동군	하동발전소	2,391	8,341	2,391	3,556
고성군	삼천포발전소	2,303	9,223	2,303	3,962
태안군	태안발전소	3,110	7,868	3,110	3,222
보령시	보령발전소	4,386	6,481	4,386	2,634
당진시	당진발전소	11,457	4,859	11,457	1,974
여수시	호남발전소	24,770	2,331	24,770	1,076

□ 가장 최우선 당진, 보령, 태안, 서천, 고성, 하동, 여수 시군 지역단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자체, 시·군의회, 지역주민, 발전1, 2, 3차 해당업체, 노조) 이를 통한

증충적인 논의기구의 확대. 충청남도-중앙정부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 ① 시군 조례제정을 통한 협의체 상설화 운영-고용보장과 지역영향 모니터링
- ② 충남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년 3월 3일) 세부운영 반드시 필요
- ③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전환 고용지원법 법제화 추진 건의를 통한 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지역전환 개발

□ 발전소 인력현황 (정의당 류호정의원실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인력현황(2022년 6월 기준)

[표 1] 발전소 비정규직 규모와 재배치 현황(2022.6.현재)

	업체 명	발전소 비정규직	석탄화력 비정규직 (2021.현재)	재배치	정년퇴직	계약해지	석탄화력 비정규직 (2022.현재)
경상정비	한전KPS ¹⁾	2,355	1,486	115	1	-	1,485
	1차하청	2,771	2,295	49	2	-	2,293
	2차하청	499	437	9	-	14	423
	(KPS하청)	320	308	-	-	38	270
연료운전	1차하청	2,575	2,474	119	2	2	2,470
자회사	5개 자회사	2,678	1,278	131	5	4	1,263
	합계(명)	11,198	8,278	423	10	58	8,204

* 2021년 10월 기준, 발전소 비정규직 총원(류호정 의원실)을 기준(인원1)으로, 발전소 비정규직 총원 중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총원(인원2)을 산출하여, 보령, 울산, 호남 재배치 현황자료(2022.01, 류호정 의원실)를 보정하여 산출한 인원(현원)임.

** 화력발전소 : 남동발전(삼천포, 영흥, 여수), 남부(하동, 삼척), 동서(당진, 동해), 중부(보령, 신보령, 제주, 신서천), 서부(태안), 남부(하동, 삼척), 남동(삼천포, 영흥, 여수)

□ 재생에너지 계통의 자격증 취득과 산학협력반 운영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기사, 위험물산업기능사-기사
- 용접기능사-기사, 안전관리(가스기능사~기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사)

- 1, 2, 3차 용역업체 중심으로 시행필요

자격증	응시횟수(년)	자격증 개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기사(태양광)	3회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직무
에너지관리기능사	4회	건축물 및 산업용 보일러와 부대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기기의 설치, 배관, 용접 등의 작업과 보일러 연료와 열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운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
에너지관리기사	3회	각종 산업기계, 공장, 사무실 아파트 등에 동력이나 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및 관련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수업무
위험물산업기능사	4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
위험물산업기사	3회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
가스기능사/기사	4회 3회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공급시설, 용기, 기구 등의 제조 및 수리시설을 시공, 조작,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 가스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하고 충전하기 위해 예방조치 점검과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운반, 관리 및 용기부속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
용접기능사/기사	4회 3회	용접은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및 건설 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설비의 제조, 조립, 설치,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용접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전문화된 기능인력
산업안전산업기사/기사	4회 3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인력필요시 전직 가능

👉 귀농/귀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공동체 순환 (지역인구감소 방지효과)

다

고용과 연계한 선고용-후교육 취업프로그램 발굴 및 기업지원

-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고용-후교육 원칙하에 자격 취득 후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태양광, 풍력, 수소, LNG발전소 고용 반드시 필요)
- 자격증 취득과정 정의로운 전환기금에서 업체 교육훈련비, 장기 유급 휴가에 따른 보상금 지원 필요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확대 적용 관련,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관련 추진 계획

- ▶ 이직자 취업 지원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 설치하고 실질적인 취업 및 관리
- ▶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코로나19 및 조선업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업종의 핵심인력 고용유지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함('20.10월~)
- ▶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관련 장기유급휴가 훈련 수요 발생 시 지원을 검토

불가피한 인력조정 시 사전 전직준비를 위한 방안 중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 ▶ 근로자는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이때, 학업의 사유로는 학교 정규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포함함**

- ▶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15~) - **충남에서는 교육훈련비 지급 마련 필요**

* 단축노동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을 최대 1년간 지원('22년 예산 241억원)

- ▶ 따라서,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가. 노동자 등록제 실시를 통한 지원방안 및 일자리 사후관리
 나. 전환 재배치 시 이주대책 및 정주 조건 마련
 다.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자, 지역주민 심리치료

가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List-Up 지속적 사후관리

- 1,2,3차 발전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자 등록을 통해 향후 지원방안 및 일자리 사후관리 모델 마련
-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List-Up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방안 마련**
 - 데이터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리 체계에 충청남도, 발전사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화력발전 종사자 등록제 신청서

성명		소속회사(현근무지)		사진		
주민번호		입사일				
성별		직군(운전, 정비, 사무, 환경시설, 경비, 기타)				
연락처		주소				
영						
가족관계	생년월일	성명	직업	폐쇄시점	폐쇄이동현황	직군
부모				예)태안 2025년	예)보령화력→태안화력	
배우자						
자녀						

보유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일
예)설비보전기사			
예)용접기사			
희망전환직종(LNG, 신재생에너지, 타직종)		전년도 원천징수임금	예) 5280만원
희망취득자격증	1순위	2순위	3순위
최종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병역사항	구분(군필, 미필)	복부기간	만기
보훈사항	보훈자관계	보훈대상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전환 재배치 시 이주대책 및 정주 조건 마련

- 전환 재배치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시 공공임대주택, 저리로 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대출
- 중앙정부 에너지전환기금 요청과 금융기관 연계한 이주대책 지원
- 이주로 인한 자녀 교육지원방안(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지원대책 마련)

다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자, 지역주민 심리상담

- 군, 시단위 자살예방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마련
- 수요조사를 통한 해당노동자, 지역주민 상담 신청서 작성
 - ① 발전소 방문을 통한 전체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 ②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방식 운영
 - ③ 해당지역 홍보(지역신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안내

4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 민간-재벌-외국투기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금지-중단
- 발전공기업 통합 및 재공영화 추진을 통한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관련 논의
-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발전공기업 통합 및 (가칭)통합재생에너지공기업 설립
- * 통합재생에너지공기업 설립과 연동해, 재생에너지 분권화 원칙에 부합하는 충남지역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 수립 방안 마련
- * 해고 없는 전환을 위한 지역 총고용 보장-확대 방안



참고자료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계획

-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기본계획안

◆ 탈탄소화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I 추진 배경

(1) 현황

- 정부는 '20년 6월 그린뉴딜 발표,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 준비
-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연간 26,775톤 / 화력발전소 전(전) 96개 중 26개)하고 있는 등 에너지전환 시급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3. 12. 28)에 따라 '20년 보령 1·2호기 폐쇄, 32년까지 12기 단계적 폐지 예정(24년-6호, 25년-4호, 보령5-6호)

- '25년 4기(보령 2, 대안 2), '28년 1기(대안), '29년 3기(대안 2, 대안1), '30년 2기(대안), 32년 2기(대안)

-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충남형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프로그램 개발·추진 중

(2) 기금 필요성

- (재정적 대비)**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재구조화 등의 대책 및 예기치 못한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미래에 가장 가능한 재원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음
- (운영 탄력성)**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관련 사례가 적고,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등 - 자금 운용이 좀 더 탄력적인 기금 재원을 조성하여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 사례마다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피해 예방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사례 창출

II 기금 개요

- (근 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기관)
- ① 에너지 전환·대응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한다.

- (운용규모) 100억 원
- (기 간) 2021년 - 2025년(5년간, '25년까지 운용하고 필요시 연장)

계	연도별 조성계획(단위 :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0	10	15	25	25	25

- (기금재원) 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시·군 부담금, 기타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기금용도)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분석
 -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금 등)
 -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사업 등
 -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성 및 부지의 배제,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운용주체) 충청남도

직위	기금운용관	기금분일운용관	기금출납관	비고
담당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